

대통령 바뀌고 코리아 디스카운드 해소 ‘격변의 대한민국’

尹, 내란 가담자들과 수사·재판중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작업 착수

민주당·야4당·시민단체 등 공동
오늘 내란·외환 종식 시민대행진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45년 만의 비상계엄이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벌어진 사태였다.

이 같은 계엄은 수포로 끝났으며 그로부터 1년 후 대한민국은 격변의 시간을 보냈다. 먼저, 대통령이 바뀌었다. 얼어붙은 내수, 불안정한 국내 정세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어느 정도 해소된 모양새다. 외견상으로는 12·3 내란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마련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그러나 아직 윤 전 대통령과 내란 가담자들이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내란 특검이 아직 수사를 마치지 못했다. 정부에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내란 임무 종사자를 가려내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며, ‘내란 척결 및 극복’ 의지를 버리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내란 사태 1년을 맞아 3일 국회 일대에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이 열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진

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 시민단체인 내란종식·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공동 주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민주주의가 위협받은 상황에서 시민들이 직접 거리에 나서 헌정수호 의지를 보여줬던 경험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기 위한 취지로 열린다.

여기엔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민주당 대표로서 당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임 것을 지시했으며, 시민들을 향해 국회의 계엄해제를 도와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에 시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수호한 데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현장에 직접 참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위대한대한 국민에 대한 감사를 그 당시 현장에서 직접 드리는 것이 여러모로 의미가 있겠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참석 취지를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尹 탄핵부터 조기대선, 정권교체까지… 시민이 이뤄낸 국가 정상화

12·3 계엄사태 그 후

현재, 지난 4월尹 파면결정 내려
6월3일 대선, 이재명 대통령 당선

1분기 GDP -0.2%→3분기 1.1%
▲, 6개월간 정상국가 복귀 총력

12·3 내란 사태 발발 1년이 다가왔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한국 사회는 1년간 숨가쁜 정치 일정을 보내야 했다. 수천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이뤄낸 계엄해제,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정권 교체가 내란 사태 6개월 만에 이뤄졌다. 정권 교체 이후 멈춰있던 행정부가 움직이며 정상 외교 복원 등 국정 정상화에 속도를 높였다. 모든 것은 한국 사회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 덕에 이뤄질 수 있었다.

1년 전 12월 3일 밤 10시27분. 윤 전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일인 지난4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 모인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계엄군이 국회로 들이닥쳤다. 당시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시민들을 향해 “국회로 모여 달라”고 도움을 청했다.

한밤중임에도 국회 앞으로 모인 수많은 시민들은 계엄군을 막아섰다. 한 시민은 장갑차를 몸으로 막으려기도 했다. 국회 관계자들과 보좌진들은 경내 집기를 가져와 바리케이드를 쌓거

나, 헬기 착륙을 저지하기 위해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등 절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비상계엄 선포 1시간 만에 100여명의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왔고, 12월 4일 자정이 지나자 우원식 국회의장도 의장석에 착석했다. 그리고 12월 4일 새벽 0시48분을 기해 본회의가 열렸다. 곧바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요구안이 상정됐고, 새벽 1시1분 가결됐다.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면 지체없이 대통령은 비상

계엄 해제를 선포해야 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내각은 3시간 동안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러다 윤 전 대통령이 새벽 4시27분쯤 담화를 통해 계엄을 해제했다.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종료된 것이다.

국회는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일주일 전인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탄핵안은 개표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회 앞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에 두 번째 탄핵안은 재적 300명 중 204명이 찬성하며 가결됐다.

그로부터 약 4개월 간 헌정 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탄핵 심판이 진행됐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부터 정치권은 극한 대립을 거쳤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올해 4월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고, 6월3일 대선을 거쳐 이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 6개월 간 정상국가 복귀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취임 12일 만에 캐나다에서 열린 주

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정상외교에 데뷔했는데, 이는 전세계에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내놓기 위해서였다. 이를 시작으로 유엔 총회,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 다자외교 무대에 참석해 한국의 정상화를 알렸다.

내란 이후 뒷걸음질 쳤던 경제 회복에도 총력을 다했다. 한국의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19%였으나, 2분기 0.675%로 반등한 후 3분기 1.166%로 올랐다. 내년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내수 개선 등으로 2%대 성장도 예상하는 보고서도 나왔다. 코스피 지수도 4000선을 넘나드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 1년을 하루 앞둔 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예진 기자

‘강성 리더십’ 거대 양당… 대화·타협·양보 사라져

정치권, 저강도 혼란 지속

민주당, 의석수 기반 일방의사 진행
국민의힘, 국민 설득 없이 내부결집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연말을 만끽하던 사회에 강도 높은 혼란을 일으켰고,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과 6·3 대통령선거 이후에도 정치권은 진영에 따라 대척점에 서며 소통보다 갈등에 집중했다.

◆거대 양당에 등장한 ‘강성 리더십’
윤 전 대통령이 물러나고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거대 양당에 강성 리더십을 표방하는 지도부가 구성됐고 대화·타협·양보가 사라지며 사회에 짙은 그늘을 드리웠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성 팬덤을 보유한 정청래 대표가 당권을 잡았고, 임기 초 ‘야당 대표와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정국이 차갑게 얼어 붙었다.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내란 극복과 검찰·사법·언론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추가 특검 설치 여론전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윤 전 대통령 탄핵·21대 대선을 거치며 당 내 개혁보

다 내부 결집에 힘썼고, 한 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측근이었던 장동혁 대표가 당권을 잡았다. 장 대표는 자신의 공약대로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면화하기도 했다.

대선을 거치며 지지층이 우경화됐고, 극우세력까지 당에 가세한 국민의힘은 소장파 의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엄 사과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국회 상임위에서도 강성 다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며 회의장은 연일 고성으로 열렸었다.

◆의석수 기반 독주 VS 반성 없는 외침
양당이 계엄 이후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이어가자, 현실 정치에선 민주당이 의석수를 기반으로 일방으로 의사를 진행하고, 국민의힘은 국민 설득 없이 내부 결집에만 골몰하는 모습이 반복됐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을 차례로 재발의했고, 의석수가 뒤지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통해 지연 전략을 펼쳤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 9개의 법안에서 필리버스터가 실시됐고 대부분 민주당이 일방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의 연이은 구설, 해병대원 순직사건,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 정권의 실책이 겹치며 22대 총선에서 기록적인 대패를 기록했다. 계엄 이후 안철수·윤호숙·김용태 등을 내세우는 혁신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해 저절할 반성과 강도 높은 혁신을 주장하긴 했으나, 당내 반대 여론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다.

계엄 이후 혁신 없는 당 운영을 이어온 결과, 당의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은 떨어졌고 ‘집토끼’들만 보고 정치를 하는 야당, ‘영남 자민련’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박태홍 기자 pth7285@